

20대 총선 보건복지 공약 평가 3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복지,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차례

분야별 공약 평가	3
분야별 총평	17

분야별 공약 평가

1. 노인복지

1) 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 정당별 공약 비교

<표1> 노인일자리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20년까지 일 자리를 매년 10만개 씩 확대 공급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물 우선 구매 등을 권장 ·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16년 128개소->'20년 262개소) 설치 및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 자리를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은 단계적으로 2배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하여 일자리개발, 노인생산물 인증 및 판매지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노인 맞춤형 사회적경제영역 지원 확대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
실효성	×	○	△	△

- 새누리당은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전담기관 확대, 전담인력 처우개선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 확대보다 지원금 인상이나 일자리의 안정성이 더욱 시급하며, 현재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은 유사,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비 및 네트워킹화가 시급하고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1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전환 등의 보장이 필요함. 또한 노인생산물 우선 구매 권장, 노인친화기업인증은 이미 노인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새로운 공약 아니라고 판단됨
-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일자리 수 및 수당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어르신일자리 지

원금은 시장자립형을 제외하면 2004년 도입 이후 20만원으로 책정된 지원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수당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노인돌봄

● 노인돌봄 정당별 공약 비교

<표2> 노인돌봄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몸어르신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몸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강화 • 자살고위험군 노인 대상 통합적 자살예방 사례관리 강화 • ‘시니어 행복센터’ (가칭) 설치 및 시범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을 여가, 건강 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종합복지센터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2배 확대. 이후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직영 요양시설 확충하여 공공노인 장기요양시설 확대 • 홀몸어르신 보호를 위해 경로당에 조리 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하여 공동숙소로 탈바꿈, 경로당 쉼어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매년 1%씩 확대 • 국공립장기요양시설 단계적 확대 • 소규모요양시설 확대 •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독거노인을 위한 홈쉐어링 및 공동주택 도입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
실효성	×	×	△	△

- 새누리당이 제시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은 19대 총선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매년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혜자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홀몸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우울과 고립된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중복사업으로 판단해 오히려 서비스중단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살관련 공약 같은 경우, 이미 시군구 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공약이라고 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의 ‘시니어 행복센터’와 더불어민주당의 ‘어르신종합복지센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공약이라 평가할 수 없음

-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국공립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보건 의료

1) 간호간병

- 간호간병 정당별 공약 비교

<표3> 간호간병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 '16년 4월부터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간병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고용하여 1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 간병서비스제도 조기 확대 시행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실효성	△	○	△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간호간병에 대한 조기확대 도입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2015년 메르스 대책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새로운 공약이라고 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은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근무, 인텐시브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환자당 인력기준을 줄이는 정책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은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간병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여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함
- 정의당은 간호간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2) 건강보험

● 건강보험 정당별 공약 비교

<표4> 건강보험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감소 추진 -최저보험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로 현식하기 위해 직장파 지역의 이원화되는 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에 대한 부과 방식을 폐지하는 등 건강보험 소득 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
실효성	△	○	△	△

- 현재 건강보험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 방식을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는데, 4개 정당 중 가장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건강보험 보장성

● 건강보험 보장성 정당별 공약 비교

<표5> 건강보험 보장성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2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혈압, 당뇨 등 노인 만성질환 관련 약값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 소득 수준에 따른 약값 본인 부담금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15세미만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보장(비급여포함)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실효성	△	△		○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55%이며, OECD 평균 7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반면 정의당은 15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보장 등을 제시하는 등 보장성을 높이는 공약을 내걸고 있음
- 한편, 새누리당의 어르신 의료비 정책제 기준을 인상하는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만성질환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약값 차등화 지급은 선별적 정책이라 할 수 있음

4) 의료민영화 관련

● 의료민영화 관련 정당별 공약 비교

<표6> 의료민영화 관련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 제외, 원격의료 한정적 추진,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관련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리병원 중단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실효성		△		○

-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으로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며, 법인약국 저지는 긍정적임. 정의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임

5)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정당별 공약 비교

<표7>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1차 의료강화를 위한 동네 병원 지원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 지원 확대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1차 의료강화 법인의 공적 성격 강화 및 개인병원을 법인화 전환 지원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인력, 시설 인프라 지원 OECD 평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실효성		△	△	○

-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확충임
- 새누리당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음.

6) 민간의료보험 정당별 공약 비교

● 민간의료보험 공약 비교

<표8> 의료공공성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 실손의료보험을 인 하하기 위해 민간의 료보험법 제정	• 민간의료보험법 제 정하여 실손의료보 험 규제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실효성			×	△

- 정의당은 민간의료보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 국민의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약 없이 건강보험과 사보험의 상생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손의료보험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효성이 의심됨

3. 보육

1)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정당별 공약 비교

<표9> 아이돌봄서비스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 0세~1세까지 지원하 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2세까지 확대 • 시간당 이용단가 상 향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실효성	△			

-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계층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누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상아동만 확대하는 것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새누리당이 제시한 이용단가 상향조정은 종사자의 측면에서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용요금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선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2) 보육예산

● 보육예산 정당별 공약 비교

<표10> 보육예산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국고 지원 확대하여 보육대란 해소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실효성		○	△	○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반면 새누리당은 보육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대통령 공약이었던 교육, 보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이 명백함에도 새누리당의 보육 예산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평가할 수 있겠음

3) 보육공공성

● 보육공공성 정당별 공약 비교

<표11> 보육공공성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국가 재정 및 환경여건 고려 추진 지역별 취원대상아 인구추이 및 초등학교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에 기준하여 지원하고 특별활동비 등을 표준보육비에 포함하여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 원칙)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및 바우처 방식에서 시설 직접 지원으로 전환 지역거점센터 운영, 교사처우 국공립수준으로 향상 등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강화 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확대 우수교사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
실효성	×	△	△	○

- 새누리당은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국가 재정 및 환경여건을 고려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며 목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됨. 또한 유휴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유치원 증설을 병설유치원 확대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함. 병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제약이라든지, 공간운영에 있어서의 제약조건, 인력의 부족(영양사, 조리시설 공유 등) 등의 문제는 단설유치원으로만 해결 가능함. 따라서 가능한 한 신규 주택단지, 아파트 재건축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단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표준보육료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정의당은 최근 정부가 법 근거 없이 추진한 초과보육에 대한 폐지를 포함하여 가장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됨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1) 기초연금

● 기초연금 정당별 공약 비교

<표12> 기초연금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 없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생애주기별 노후소득준비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 없이 단계별로 30만 원 지급(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소득연동 방식으로 전환) • 기초생계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제외 •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전액 국고 충당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실효성		○	△	○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통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중복급여를 허용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았음.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이라고 보임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3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국민의당은 급여수준 인상은 없음. 정의당은 점진적으로 기초연금의 대상범위를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차등지급의 기준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물가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연동방식을 적용하여 노인들이 실질소득을 보장할 것을 공약하고 있어 가장 노후빈곤 해소에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았음

2)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 정당별 공약 비교

<표13> 국민연금제도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주부, 청년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전업주부의 추납허용 -청년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창업크레딧/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최소 45% 유지(추가삭감 중단) •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구조개혁(1소득자 1연금체계로 구조개혁) : 가입자 구조 단순화, 경력단절 여성의 추납 허용범위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전액 부담(300인 이상 사업장 한정) • 양육크레딧 도입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2>신설 : 월소득 140만원 미만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 • 군대 및 실업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양육(육아)크레딧 확대 전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급여 서비스 강화와 심사평가 등 인력 총원 •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 경력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임의가입 장려,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 미충족 대상에게 일시금 추납 허용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
실효성	×	○	△	○

-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모든 주요정당이 공약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 구체성이 크게 차이남. 가장 소극적인 공약을 제시한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업주부의 추납허용’을 재탕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년을 위한 두루누리 확대 공약 또한 실제 청년들의 노후대비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을 제안하고 있어 실효성이 가장 낮음. 국민의당은 ‘1소득자 1연금’이라는 연금구조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그나마 양육크레딧 도입,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를 축소 공약을 제안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임

-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에서 유지하고 추가삭감을 중단하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걱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점이 있으나 지난해 국회¹에서 합의된 소득대체율 50%보다는 후퇴한 수준임. 또한 성년축하 가입지원·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는 취업여부를 떠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훨씬 넓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음. 정의당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고,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 사각지대 전반의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2’를 신설하는 등 국민연금제도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3)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 정당별 공약 비교

<표14> 국민연금기금 부문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연 10조 원, 10년간 100조 투자.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매입. 채권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최소수익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투자 강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시행 • OECD 평균 공공주택 12% 확충을 위한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 국민연금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실효성		○	△	○

-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사회적투자(공공투자)를 통해 다양한 공공인프라를 마련하는 공약들이 주를 이뤘음.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청년희망임대주택’을

1 2015.05.02. 국회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의 합의 내용 중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약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투자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투장 방식, 전세대를 아우르는 투자분야(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관련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사회적책임투자와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공익적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기금으로서 기능하도록 공약을 제시함

5.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당별 공약 비교

<표15>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수급자20%를 포함하여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를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도를 몰라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 대상 학생을 추가 발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급여 적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빈곤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전체로 주거급여 확대 및 급여요율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의 취업 시 수급자격 1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 주거급여 인상 -지원액의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소득별 가구원별 지역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함(주거급여법 개정)

●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필요성	△	○	○	○
실효성	×	△	△	○

- 국민의당은 유일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이후 수급자격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공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빈곤문제를 완화와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러한 수급자격 유예 대상이 장애인에만 제한된 점, 수급자격이 어떤 급여를 기준인지 등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새누리당이 제안한 교육급여 관련 공약은 교육부가 저소득

층에게 제공하던 다양한 서비스가 대부분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 추진 및 대상학생 추가 발굴은 공약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매우 희박함

- 주거급여에 대해 새누리당은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의 거주대상자에 주거급여 수급자의 20%를 포함하도록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미미하고 공약임.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주거급여의 보장수준과 대상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고, 정의당은 주거급여를 약 2배 인상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거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냄
-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장 많은 비수급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매우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자수를 통제하고 예산을 줄이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에 처한 국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욱이 정의당은 전국적 복지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점진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차를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분야별 총평

1. 노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라기보다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 제시된 공약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유사, 중복되어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신규 기관을 만들어서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정의당은 노인복지관련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2. 보건의료

-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로 하는 개편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음.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당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부족한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음
- 메르스 사태로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이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공공의료를 확립하는데 있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보육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새누리당은 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현안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고, 지역적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빈껍데기 공약세트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 새누리당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국민들의 노후불안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 정당의 공약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초연금, 국민연금기금 등과 같이 노인빈곤, 국민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공약을 내놓지 못함. 국민의당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비전제시보다 단편적인 개선안 위주에 공약으로 국한되어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음.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노후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관점과 비전이 분명함. 다른 정당에서도 다루지 않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넓은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두루누리사업 확대 등 그동안 노동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5. 기초생활보장제도

-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주요 정당들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제대개선의 비전이나 과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 새누리당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주거급여의 보장수준과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하여 실효성을 담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당은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강화하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으나 구체성, 실효성이 떨어지며, 빈곤층 전반에 대한 공약이 부재함. 정의당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재원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빈곤해소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보건복지 공약 평가

발행일 2016. 4. 7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

담당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